

## 법령 I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권한과 주체를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소관 주무부장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주무부장관의 지정 - 국무총리
-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자원소요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 요구방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 행정안전부장관
- ㄷ.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권고 - 시·도지사
- 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집행계획의 승인 - 행정안전부장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문 2. (가) ~ (다)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계획이고, 甲 ~ 丁은 그 권한을 가진 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甲은 대통령으로부터 승인받아 확정된 [ (가) ]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였다.
- 乙은 甲으로부터 통보받은 [ (가)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 (나) ]에 관한 협의에 응하였다.
- 丙은 甲에게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 丁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 (다) ]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

- ① 甲이 다른 법령의 개정예 따라 (가)의 용어를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② 확정된 (나)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안을 작성하여 甲에게 제출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丙이 통계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乙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④ 丁이 단순한 문구 수정 등 (다)의 일부를 보완한 때에도 지체 없이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3.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A도의 도지사는 그 소속 공무원 甲으로 하여금 乙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관내의 관리대상물자 B의 실태를 조사하게 하였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乙에게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甲은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② 乙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B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甲은 B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 乙에게 미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④ 乙이 甲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4.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 건설기계를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하고, X시에 거주하는 A의 소유자 甲에게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甲에게 송달된 고지서에는 품목, 규격, 수량 및 지정에 따른 임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만 인도·인수 장소는 그렇지 않다.
-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A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甲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ㄷ. 甲이 자신에게 송달된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시켜 그 효용을 훼손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ㄹ. 국토교통부장관은 A의 노후화로 인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甲에게 그 지정해제의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문 5. 중점관리대상업체 A 방송사 및 이에 종사하는 중점관리대상인력 甲이 참여하는 동시관리훈련이 2022. 3. 25. 1일간 실시되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에게는 식비를 지급해야 한다.
- ② 甲이 2022. 3. 25.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 훈련의 대상이 된 경우에 예비군 훈련이 우선한다.
- ③ A의 장은 甲이 참여한 훈련기간을 휴무로 정하여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 ④ 훈련으로 인해 甲이 입은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무총리는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국무총리는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아니더라도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로 실시하는 정부연습을 위해서 업체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수량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주무부장관은 긴급한 경우에 정부 비축물자의 비축을 해제한 후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문 8. 대통령 甲, 국무총리 乙 및 행정안전부장관 丙 등으로 구성된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국 훈련을 실시하고자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훈련의 실시명령은 丙이 관계 주무부장관과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乙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중 56세 이상인 사람(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 중 丙이 인정하는 사람은 비상대비 훈련을 면제한다.
-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丙에게,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물적자원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丙이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乙에게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문 1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에 대한 사례의 설명으로 <보기>의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甲은 아버지 乙과 함께 군부대가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에 참가하였다. 甲은 위 훈련에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된 자신 소유의 값비싼 준설선(浚渫船)을 훈련대상물자로 제공하였고, 乙은 중점관리대상 인력자원으로 훈련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乙은 안타깝게도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훈련 도중 거센 호우로 甲의 준설선이 전복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손실을 입었다.

— <보 기> —

- 甲은 (가)의 유족으로서 보상을 받는다.
- (나)은 甲에게 준설선의 멸실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甲의 준설선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다)이다.
- 준설선에 대한 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甲은 (라)을/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u>(가)</u>	<u>(나)</u>	<u>(다)</u>	<u>(라)</u>
①	전몰군경	국방부장관	5년	보상금 지급
②	순직군경	국방부장관	5년	보상금 지급통지서
③	순직군경	행정안전부장관	3년	보상금 지급통지서
④	전몰군경	행정안전부장관	3년	보상금 지급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상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방위 물자 및 장비를 보급 및 비축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 연장의 심의와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는 중앙민방위협의회가 관장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 ②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소방청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에 포함된다.
- ③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민방위기획위원회 및 재난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된다.
- ④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물자.시설 등의 점검 및 비용의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그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점검의 주기.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주민의 수 및 지형 등 지역 특성은 민방위 물자.시설 등의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

문 19.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 乙, 丙, 丁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 甲은 1990. 4. 20. 출생한 남자로서 2018. 2.부터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1. 3. 외항선을 운항하는 B 해운회사의 선원이 되어 그 해에는 6개월 동안 승선하였고, 2022. 2. 5. 승선하여 같은 해 8. 31. 까지 승선하기로 되어 있다.
- 乙은 1996. 2. 10. 출생한 남자로서 2016. 3. 2. 산업대학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며 2022. 8. 졸업이 예정된 자이다.
- 丙은 1987. 7. 5. 출생한 남자로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후 법원행정처에 근무하고 있다.
- 丁은 1990. 9. 10. 출생한 여성으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인 C 회사에 7년째 근무하고 있다.

— <보 기> —

- ㄱ. B 해운회사는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하고, 甲은 B 해운회사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된다.
- ㄴ. 乙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2022. 4. 현재 민방위대의 조직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2. 8. 졸업하면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다.
- ㄷ. 법원행정처는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하고, 丙은 법원행정처에 둔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된다.
- ㄹ. 丁은 민방위대의 조직 대상자가 아니지만, 민방위 대원으로 지원하면 C 회사에 둔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문 20.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민방위 대원 甲은 소속 기업의 해외파견으로 1년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 ㄴ. 의료분야의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민방위 대원 乙은 의료분야의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 ㄷ. 교육훈련 명령자는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원 丙의 결혼식을 이유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丙의 교육 및 훈련을 미룰 수 있다.
- ㄹ. 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의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민방위 대원인 丁은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문 2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 ② 동원명령은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동원명령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공고를 생략할 수 없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 ④ 동원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서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을 선택할 수 있다.

문 22. 민방위기본법령상 재해 등의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 대원으로서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부상의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교육훈련 중의 부상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읍·면·동장의 동원명령으로 민방위 대원이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에 따른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④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기본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치료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23.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와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제거를 직접 할 수 있다.
- ②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응급조치권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 차량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 제한 또는 금지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문 24. 다음은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규정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3조(민방위 경보)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면장·동장 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① ㉠은 해당 읍·면·동에서만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②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에 포함된다.
- ③ ㉢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운수시설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화물처리시설은 ㉣을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25. 「민방위기본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민방위 대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 ㄴ. 타인을 고용하는 자가 피고용인이 민방위 대원으로서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명령에 따른 주민의 피난을 방해한 경우
- ㄹ.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① ㄹ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 지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직장예비군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역예비군으로 지원하려는 미성년자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할 때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지원하여 직장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복무기간은 종료되나, 본인의 신청으로 연장할 수 있다.
- ④ 예비역 부사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로 지원하여 임용될 수 없다.

문 27. 예비군법령상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경찰청장은 소속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의 전역인사명령서를 전역일부터     (가)    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소속 예비군대원에게 전입·전출·퇴직·사망 등의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나)    일 이내에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다)    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훈련보류원서를 제출한 지역예비군대원은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라)    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u>(가)</u>	<u>(나)</u>	<u>(다)</u>	<u>(라)</u>
①	7	3	30	14
②	14	2	30	7
③	7	3	60	7
④	14	3	60	14

문 28.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대대·지역대·중대·소대·분대로 편성하며,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한 경우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군대원을 시·군·자치구 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 ④ 국방부장관은 같은 항구에 여러 개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하며,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장 중 연장자를 직장의 장으로 한다.

문 29.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같은 건물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ㄴ.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시에 있는 경우에 직장 단위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수탁경찰서장이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ㄷ.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ㄹ. 같은 직장이 같은 광역시의 군에 있는 경우에 직장 단위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문 30. 예비군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동원명령 발령 당시 출어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예비군대원은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 ②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 ③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지역에 있던 예비군대원이 결혼식을 이유로 동원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동원명령 발령 후 3일 안에 동원 연기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한 경우 그 동원사유가 없어지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일 이내에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문 31.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X시를 관할하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2022. 1. 25.(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비군 훈련소집일을 2022. 2. 27.(일)로 한 훈련 일정을 공시하였다. 이후 예비군대원 甲, 乙을 비롯한 X시 예비군대원들에게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을 준비하면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전달을 원하는 乙로부터 미리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았다.

甲에 대한 소집통지서는 甲이 미리 선정한 수령인 丁에게 전달하였고, 乙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인터넷에 공시한 훈련 일정을 확인하였다. 한편, 관할지역 외의 예비군대원 丙은 훈련 참가를 신청하였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 <보 기> —

- ㄱ. 동원에 대비한 점검을 하려는 경우라면, 수임군부대의 장은 전화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할 수 있다.
- ㄴ. 수령인 丁에게 2022. 2. 18.(금) 甲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였고, 다음날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면, 소집통지서는 甲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 ㄷ. 乙이 수임군부대의 장이 인터넷에 공시한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2022. 2. 22.(화)에 전자문서로 통지하였다면, 乙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 ㄹ. 丙이 2022. 2. 23.(수) 수임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 참가를 신청하였다면, 이 경우 丙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문 32.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의 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집되어 훈련 중인 남성 예비군대원은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때 예비군모.예비군화 및 예비군표지장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 ②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인 예비군대원은 예비군표지장으로 모표.흉장 및 견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소집되어 훈련 중인 여성 예비군대원에게 예비군화가 아닌 신발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예비역 장교인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 이외에도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문 33. 예비군법령상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지역 일대의 마을에 침투한 무장공비를 소멸하기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게 긴급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A 지역을 관할하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甲이며, 관할 경찰서장은 乙이다.

- ① 甲은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을 乙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甲이 무장공비의 소멸 작전에 지장을 주는 A 지역 주민의 축사를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甲이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A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甲이 작전상 필요에 따라 A 지역에 대해 내린 출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주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 34.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를 수행한 후 동원 해제되어 귀가 중에 부상을 입었고, 치료로 인하여 100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甲의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의 가족으로서 보상 대상자가 된다.
- ㄴ. 甲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80일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 ㄷ. 甲은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치료비용은 해당 의료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ㄹ. 수임군부대의 장은 甲에게 부상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문 35.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부대의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역대인 예비군부대의 동원 및 작전지휘 권한을 수탁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직장예비군 중 어민예비군 중대 이상의 부대의 장에게는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④ 국방부장관, 수임군부대의 장 및 수탁경찰서장은 우수한 예비군대원 및 예비군부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문 36.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읍.면.동 단위에서는 지역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다.
- ② 산업단지 직장방위협회의 의장은 산업단지에 소속된 직장의 장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방위협회의 의장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
- ④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문 37. 「예비군법」상 법정형에 의할 때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예비군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 ㄴ.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한 경우
- ㄷ. 고등학교의 장이 예비군대원으로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한 경우
- ㄹ. 예비군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ㅁ.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어 훈련소집통지서를 대신 수령할 의무가 있는 세대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 ① ㄱ, ㄴ, ㄹ
- ②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두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 시.도 또는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③ 지역위원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지역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에 속하는데, 그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된다.

문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하여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시.도대책본부의 장은 시.군.구대책본부의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지원본부를 둘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설치.운영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구조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이 설정한 위험구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 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중 민간 소유 지역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ㄷ. 안전도가 ‘미흡’으로 구분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월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ㄹ. 안전도가 ‘미흡’으로 구분되었던 특정관리대상지역이 그 지정에서 해제되는 경우, 그 사유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각종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가)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수립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부합동 안전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험구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라)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라)
①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정부합동안전점검단	1년
②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1년
③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5년
④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정부합동안전점검단	5년

문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재난관리자원으로서 비축·관리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전기·통신 기자재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 ㄴ. 시·도지사는 재난예방조치 실적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으로 구성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ㄹ.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의 장은 관할 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인접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보수 등 정비를 명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ㄷ, ㄹ

문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하면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군부대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급한지 여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 ③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구조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은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선박의 점유자에게 그 선박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점유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문 44. A군의 군수 甲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2022. 3. 1. 해당 재난현장에서 응급조치에 장애가 되고 있는 건축물(乙 소유 및 거주)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은 긴급한 경우 乙에게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 등을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수 있고, 그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甲은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A군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③ 甲은 2022. 5. 29.까지 乙과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乙은 협의가 결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문 45. 홍수로 인한 자연재난으로 A도 B군 거주자인 甲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지원 기준은 A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② 甲에 대한 지원으로서 통신요금, 전기요금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다.
- ③ 甲이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을 받게 된 경우, 甲은 건물 수리를 담당한 건축업자 乙에게 수리비를 포함한 복구비 전액에 대한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 ④ 甲이 복구비를 선지급 받기 위해서는 B군수에게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선지급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이다.

문 46. A시의 최근 3년(2019 ~ 2021)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이 1,000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시의 장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매년도 10억 원 이상을 의무예치금액으로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A시의 장은 2억 1,000만 원 이상을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A시의 의무예치금액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2021년까지 A시의 누적 의무예치금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2년 의무예치금액을 5억 원으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에 산불이 발생하여 A시의 장은 경보를 발령하고 진화작업 등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및 긴급구조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시의 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인 B기관의 장에게 인력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응하여 B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甲은 화재복구 및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하였다. 甲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乙 및 아들 丙(18세), 어머니 丁이 있다.

— <보 기> —

- ㄱ. 지원을 요청받은 B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
- ㄴ. A시의 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B기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시 문서로 통보할 필요가 없다.
- ㄷ. 甲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 ㄹ. 丙은 甲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문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 B 지역에 A시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한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재난인 X사고가 발생하였다.

— <보 기> —

- ㄱ. X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은 A시의 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ㄷ. X사고로 발생한 B 지역의 피해가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한다면,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B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ㄹ. X사고로 B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